



금연 선진국으로 가는 길

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담배규제기본협약(FCTC) 당사국 총회에서, '한국은 아직까지 금연 후진국이며 금연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'는 목소리가 높았다. 일례로, 이미 전 세계 270개국에 담뱃갑에 섬뜩한 경고사진을 부착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에야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했다. 금연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아직 먼 것일까.

글 이은정 기자
도움말 금연길라잡이(www.nosmokeguide.or.kr)

지난해 11월, 세계 주요 20여 개국이 참여해 국제 담배규제 정책을 평가하는 국제 금연정책평가 프로젝트(the International Tobacco Control Policy Evaluation Project)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, 흡연자 86%가 "정부가 흡연의 유해성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강력한 담배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"는 의견에 찬성하고, 39%가 모든 담배 제품의 완전 금지에 찬성했다. 또 흡연자 55%는 담뱃갑에 지금보다 더 많은 건강정보와 경고를 표시해달라고 요구했다. 또한 국내 흡연자 중 88%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 자체를 후회한다고 발표했다. 이 같은 의견은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어려우니 강력한 정책으로 금연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흡연자의 호소로 보인다.

국내 금연정책은 최하위 수준

우리나라 금연정책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.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를 의무화하고 담배 광고 제한을 시작으로,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등 흡연을 규제하면서 지속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해왔다.

2003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담배의 해악에 대처하고자 채택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(FCTC)에 서명하고 2005년 비준을 받아,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, 담배제품 성분에 관한 규제, 담배제품 포장 및 라벨 규제, 담배광고 및 판촉·후원 규제, 미성년자 담배 판매 및 구매금지 등 비준국가로서 협약 이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. 특히 2005년부터 금연교육 및 홍보 중심에서 벗어나, 금연클리닉(보건소·민간단체), 금연상담전화, 군·전의경 금연 지원 등 금연 지원으로 사업을 확대하고, 2008년에는 공공이용시설 등에 금연구역을 지정, 운영하기 시작했다. 전자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(2010년), 담뱃갑에 경고 문구 및 금연상담 전화번호 표기(2011년) 등 국내 금연정책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. 지난해 12월부터 넓이 150㎡ 이상의 음식점(식당·술집·카페 등)에서 금연이 시행돼 오는 6월까지 홍보기간을 갖고, 내년 1월부터는 넓이 100㎡ 이상에서,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 손님을 받으려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.

한편, 이 같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연정책은 ITC프로젝트에 참여한 국가 중에서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. ITC 국가 중 미국, 캐나다, 호주, 프랑스 등의 국가는 직장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



한 반면 우리나라는 포괄적 금지를 명시하지 않았고, 특히 ITC국가 중 식당과 술집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.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OECD 회원국의 금연정책을 종합평가한 '우리나라 및 외국의 담배가격 정책 비교 분석'에서도 우리나라는 80점 만점에 16.96점으로 비교 가능한 25개국 가운데 24위를 기록했다.

금연선진국, 실내 흡연 금지·담뱃값 인상 등 강력한 규제

그렇다면, 세계 곳곳의 금연 선진국은 어떤 정책을 펴고 있을까. 프랑스는 2008년 2월 금연법을 제정해 공공장소 및 폐쇄공간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. 스페인은 2011년부터 학교 운동장과 병원, 공항 레스토랑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. 유럽 국가 중 흡연율이 높은 터키와 그리스도 2010년부터 실내 흡연을 금지했다. 미국과 영국은 TV, 라디오, 신문 등 대중매체에 담배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. 이미 담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뉴질랜드 정부도 지난해 5월, 향후 4년간 담뱃세를 40%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흡연자들을 압박했다. 흡연에 비교적 관대했던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. 2001년 시부야에서 최초로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가 발표됐고 이후 이런 움직임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됐다. 2010년에는 담뱃값을 일시에 40% 인상하기도 했다.

2020년 흡연율 29.0%, 담배연기 없는 환경을 위하여

OECD 흡연율 통계(15세 이상 성인 남성 기준)에 따르면, 2010년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40.8%로 OECD 34개국 중 최고를 기록했다. 터키(39.0%), 그리스(38.0%) 등이 뒤를 이었다. 이처럼 우리나라는 '흡연율은 최고, 금연정책은 최하위'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. 현재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 29.0% 달성을 목표로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. 2005년 14.3%이던 청소년 흡연율을 12.0%(중·고등학교 남학생 기준)로, 간접흡연 노출자 비율을 31.0%에서 6.0%(가정 기준)로 줄이겠다는 의지다. 국내 금연정책이 최하위에 머물고 금연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적인 건 우리나라 금연프로그램이 ITC국가 중에서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이다. 우리나라는 정부가 지원하는 전국적인 금연클리닉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다.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금연 선진국, 여전히 희망은 있다. ㉞

